

# 與, '윤석열 구하기' 총력 “지명철회 중대사유 없다”

### 이인영 “일부 혼선 있었으나 결격사유 아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결과보고서 채택이 여야의 극심한 이견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윤 후보자를 둘러싼 위증 논란이 '결격 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야당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듭 촉구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총장을 위해 청문보고서는 반드시 채택돼야 한다”며 “윤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할 중대한 사유는 어디에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 후보자는 그동안 청문회의 단골 주제였던 탈세와 위장전입, 투기, 음주운전, 논문표절 의혹 등 무엇 하나 문제된 것이 없다”며 “위증 논란도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자는 지난 8일 청문회에서 뇌물수수 혐의를 받던 유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 변호사를 소개해준 적이 없다고 답변했지만, 유 전 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줬다고 언급한 음성 파일이 공개되면서 위증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사건의

본질에 해당하는 내용과 관련해 (윤 전 서장의 친동생이자 윤 후보자와 절친한 사이인)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은 자신의 행위(소개)였다”고 증언했다”고 반박에 나섰다.

이어 “답변 과정에서 일부 혼선이 있었지만 (윤 후보자는) 곧바로 유감을 표했다. 그것이 더 이상 중대한 혐결이나 결격 사유는 아니다”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윤 후보자에게 거짓과 위증의 골레를 씌우려는 의도를 접어두길 바란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으로 청문회에 참석한 박주인 최고위원은 윤우진 사건에 윤 후보자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야당이 증인으로 부른 장우성 당시 수사팀장의 증언을 바탕으로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장 팀장은 (윤우진 사건에) 윤 후보자의 관여는 확인된 바 없다고 증언했다”며 이 변호사가 윤 전 서장에게 보낸 문자에 ‘윤 과정’이 명시된 것과 관련해서도 “장 팀장은 윤 과정이 윤석열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우진 사건을 수사한 주체가 야당의 증인으로 나와 선서까

지 한 말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높다”며 “이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윤대진 국장은 당시 대검 중수부 과장이었다. 윤 과장은 윤대진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선 윤우진 사건과 별개로 당시 윤 후보자가 기자회견의 통화에서 이 변호사를 윤 전 서장에게 소개해줬다”고 말한 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법사위 소속인 금태섭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인적으로 윤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후보자 자신이 기자에게 한 말은 현재의 입장에 비춰보면 명백히 거짓말 아니냐”고 따졌다.

금 의원은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고 여당 의원과 나는 대화에서 윤 후보자가 후배인 윤대진 국장을 보호하기 위한 말이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후배 검사를 감싸기 위해서라면 거짓말 해도 괜찮나”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살면서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해 본 사람은 없을 것이다. 나도 마찬가지”라며 “그러나 적어도 거짓말이 드러나면 상대방과 그 말을 들은 사람에게 사과해야 한다. 그게 상식이고 이번 논란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 이정미, 퇴임 전 ‘마지막’ 연설 “선거제 개혁, 반드시 성사돼야”

이정미 정무부 장관은 1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제와 사법개혁 관련 법안과 관련 “연내 입법을 위해 8월 안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혁위) 심의의결을 완료하자”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앞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당대표 임기 만료로 11일 퇴임을 앞둔 이 대표의 마지막 연설이기도 하다.

이 대표는 “20대 국회는 앞으로 9개월 만에 남겨두고 있다”며 “20대 국회는 다당제로 정치를 바꿔달라는 민의로 탄생했다. 그리고 촛불혁명을 거치며 더 큰 개혁을 요구받아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지난 3년 2개월을 돌아보면 이 거대한 변화의 요구 앞에 우리는 아직도 빈손”이라며 “때문에 지난 4월말 선거제와 사법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은 제대로 된 개혁을 할 마지막 기회에 다름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선거제와 사법개혁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선거제 개혁은 특정 당파가 아닌 민주주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며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로 국회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비생산적 양당제를 생산적 다당제로 바꾼다면 합의의 민주주의가 구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개혁과 관련해서는 “정치 검찰의 권력 독점을 끝내기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또한 80%가 넘는 국민이 지지하는 개혁”이라며 “반드시 성사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양 개혁 법안을 연내



처리하기 위해서는 정개혁위가 선거법에 대한 심의·의결을 8월 안에 마쳐야 한다”며 “특위 위원장을 누가 하느냐는 부차적 문제다. 중요한 것은 실제 의결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로드맵”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만일 이마저도 실패한다면 20대 국회는 촛불 민심과 완전히 역

려 “제1야당 원내대표가 박근혜 시대에 아닌 박정희 시대로 퇴행하자고 한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민주당은 불평등·불공정 극복의 정치적 비전과 의지가 있느냐”며 “한국당의 존재가 결코 집권당인 민

### “연내 입법 위해 8월 내 정개혁위 심의·의결 완료” “실패한다면 ‘모두가 패자’인 20대 국회로 기억돼”

행한 국회, 4년 내내 극단적 대립만 벌인 ‘모두가 패자’인 국회로 기억될 것”이라며 “20대 국회가 국민에게 마지막 선물을 드리자”고 역설했다.

이 대표는 지난 4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과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자”, “근로기준법의 시대에서 계약 자유의 시대로 나아가자”고 주장한 데 대해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다.

그는 “그 자유는 과연 무엇인가. 이것은 자유가 아니라 착취일 뿐”이

주장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날 연설이 당대표로서 마지막 연설인 이 대표는 내년 총선 승리를 다짐하기도 했다.

그는 “21대 총선은 촛불 이후 한국 정치의 구도를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으로 변화시킬 첫 총선”이라며 “정의당은 21대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민생과 진보를 책임질 유력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 주승용 국회부의장 ‘고령운전자 안전대책 협의회’ 발족

### 교통안전포럼, 중점 추진 과제 고령자 교통사고 감소



주승용 국회부의장(4선, 여수율)이 고문을 맡고 있는 국회 교통안전포럼(대표 이준석 국회의원)은 10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고령자 교통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경찰청과 공동으로 '고령운전자 안전대책 협의회(이하 협의회)' 발족식을 개최했다.

70명의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교통안전포럼은 2019년 중점 추진과

제로 '고령자 교통사고 감소'를 선정하였으며, 협의회의 선공적인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장윤숙 사무처장을 위원장으로 노인들을 대변할 수 있는 대한노인회, 의학계 전문가를 제공하는 대한의사협회, 경찰청, 교통 관련 전문연구기관 등 21개 기관이 참여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이고 당사자인 노인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정책 마련에 힘을 모은다.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 교통사고에는 ‘보행자’, ‘지방도로’, ‘고령운전자’라는 세 가지 키워드가 있다”며 “보행중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약 4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 교통사고 발생 건수의 90%가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지방도로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고령운전자분들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최근 5년간 연평균 10%씩 늘어나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고령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 지방도로에 대한 대책도 함께 강구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들께서 적어도 교통사고에 대한 걱정만큼은 안하고 사실 수 있도록 우리 국회교통안전포럼은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 박지원 “조국, 법무장관 100% 기용될 것...윤석열 임명돼야”

### “8~9개 장관 교체 예상...외교·안보라인 바꿔야”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10일 이번 개각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장관 하마평에 오르는 데 대해 “기용될 것이고 100% 법무장관으로 올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같이 말하며 “민정수석의 경험을 가지고 법무장관에 전면 나서 검찰개혁이나 검경수사권 조정 등 문재인 정부가 바라는 개혁을 완수해달라. 저는 환영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개각과 관련해 “7~8월

정도 8~9개 장관은 바뀔 것 같다”고 본다”며 외교·안보 라인 교체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낙연 총리가 대정부 질문에서) 대답하는 뉘앙스를 상당히 교체를 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들었다”고 내다봤다.

그는 특히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언급하면서 “능력에 비해 출세를 너무 많이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인사들) 자기 식구끼리 하지 말고, 창 안에서 서만 하지 말고 창 밖을 넘어야 한다”면서 “탕평인사가 돼야 한다”고 했다.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복직

부 장관 기용설에 대해서는 “또 회전문 인사를 한다”며 “처음에는 국토부장관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러가지고 감동을 주겠느냐”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청문회 위증 논란이 일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실사 그런 과오가 있다고 해도 앞으로 검찰총장이 돼 외압을 배제하고 정의로운 수사를 한다면 훨씬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임명에) 찬성한다”면서 “유능한 분이 외압을 막아야 한다. 소신껏 검찰 개혁을 할 수 있는 윤 후보자가 총장이 되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